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파병 한국군 즉각 완전 철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 간사로 활동하며 한국 반전 운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마북>의 김용민 기자가 이태호 간사에게 윤장호 씨의 죽음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국 정부의 ‘대(對)테러 전쟁’ 참가에 대해 물었다.

이번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故) 윤장호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제2의 윤 하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참사는 탈레반 관련자로 알려진 무장세력이 바그람 기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우리 군부대 통역병 윤 하사가 희생된 사건입니다. 지난 6년 동안

한국은 ‘대(對)테러 전쟁’ 참가라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병사 3백여 명을 파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비인도적 침략 행위라는 근거는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탈레반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불법 구금하고 수사를 빙자해 고문해 왔습니다. 또, 이들이 재판받을 권리와 포로로 대우받을 권리조차 배제해 왔습니다. 바로 이 불법 구금의 현장이 [한국군이 머물고 있는] 바그람 기지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6년 동안이나 이 전쟁의 성격을 평가하지도 않은 채 다국적군을 지원하는 공병·의료 부대 파견을 관성적으로 연장에 왔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결국 윤 하사가 희생된 것이죠. 따라서 책임은 ‘대(對)테

러 전쟁’ 참전을 6년 동안 지속해 온 한국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 한나라당 · 주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는데요.

미국과 한국 정부는 ‘테러’ 개념을 자의적인 이중잣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전 상대방이 미군 부대를 향해 육탄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걸 ‘교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테러’라고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민간인을 폭격했을 때, 한국 정부는 이걸 ‘테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표결했을 때 한국은 아예 기권했어요. 대체, 교전 상대 군인에 대한 육탄 공격과 민간인 폭격 중 어느 쪽이 더 ‘테러’에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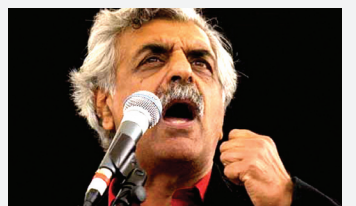
정부와 보수정당 · 언론이 이번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예외적’이고 ‘우연한’ 것이고, 우리 군은 이런 공격을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무고한 세력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대(對)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침략과 점령, 비인도적 통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려는 것이죠.

» 7면으로 이어짐



—이라크 점령 4년
—테러방지법 반대한다

6~7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라

6~7면



—KTX민세원 지부장 인터뷰
—오늘날의 여성해방

4~5면

정치 위기와
민주노동당의 과제

3면

중국 증시 폭락과
세계경제의 위기

8면

우석균 칼럼

—한미FTA와

반신자유주의 운동



<마북> 온라인 기사

www.counterfire.or.kr

러시아 혁명과 여성해방

90년 전인 1917년 3월 8일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러시아 혁명은 촉발됐다. 또 러시아 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양성 평등을 역사적 의제로 제7했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반대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테러방지법과 본질에서 같다.

끝나지 않은 여수 화재 참사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위선과 파렴치함 그 자체다. 이에 맞선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선거의 쟁점

학교 비정규직 투쟁과
민주노동당 최영순 의원의 오류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라크 침공 4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시간: 3월 17일 오후 3시
장소: 서울역 광장(집회 후 광화문으로 행진)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http://www.antiwar.or.kr>



※ 파병반대국민행동 홈페이지에서 하워드 진, 마이클 버그, 문정현, 이희수, 김기식 등 국내외 저명 인사의 3.17 참가호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군대에서 ‘썩는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썩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 버렸다.”

— 고 윤장호 씨의 부친

“윤장호 병장이 사망한 것은 김정일이 테러단체를 지원했기 때문”

— 우익 인터넷 언론
〈독립신문〉대표 신혜식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테러를 행하는 자들은 [테러 이후 피해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단호한 자세로 테러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 박근혜

“현지 근로자들에게 ‘카불에서 진품 보석을 사오지 않으면 이 총으로 쏘 버리겠다’는 한 간부의 협박을 통역 하면서 … 나는 ‘점령군’으로서 ‘피 지배자’들을 협박하고 모욕하는 일에 끊임없이 동원돼야 했다.”

— 아프가니스탄 파병 군인이었던
강성주 씨

“[아프가니스탄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 ‘미군이라는 숙주’를 통해 모든 게 이뤄지는 곳 … 한국군은 그저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보기 좋게 포장해 보낸 종합선물세트였다.”

— 〈헤럴드경제〉천영록 인턴기자가
경험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미국과 죽이 잘 맞고 있다.”
—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다시 시작된 열우당 · 한나라당의 개악 야합

2월 임시국회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또다시 각종 개악 ‘대연정’을 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개악의 핵심엔 사립학교법이 있다. 2005년 12월 한나라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은 열우당이 개혁 성과로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한나라당은 그 후 장외 투쟁을 불사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올인했고, 결국 열우당은 이런 압력에 굴복해 ‘개방형 이사제’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

노무현이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과의 회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친 며칠 뒤 열우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세균 · 장영달 지도부는 사립학교법 개악과 주택법 개정을 ‘빅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즉, 주택법 개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무현과 열우당의 논리다.

그러나 노무현과 열우당이 마치 대단한 개혁인 양 포장하는 주택법 개정도 사실 보잘것없다.

말 그대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려면 61개 항목의 내역이 모두 공개돼야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7개 항목의 공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분양원가’의 핵심이라 할 택지비 기준을 실거래 가격과 차이나는 ‘감정평가액’으로 삼았고, ‘분양원가 공개’ 적용 대상도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일 뿐인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법 · 공정거래법 개악은 우익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열우당 스스로 추진하는 ‘자발적 개악’이다. 열우당은 국민연금법 · 공정거래법 개악을 통해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욱 팍팍하게 만들려 한다.

이런 노골적인 배신과 개악에 열우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특히 최근 부쩍 개혁적 이미지에 신경쓰는 정동영과 그 주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당내 반발에다 노무현의 레임덕 상황까지 겹친 열우당 지도부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빅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사립학교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정세균)며 당내 반발을 달래야 했다. 그래서 열우당 지도부도 회기내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열우당 의장 시절 이라크 파병 ·

‘빅딜’에 합의하는 ‘싸우는 형제’ — 열우당 의장 정세균과 한나라당 대표 강재섭

한칠레FTA를 강행하고 “실용 정당” 운운하며 출자총액제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온 정동영과 같은 자들에게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 정동영계의 반발은 금새 봉합되거나 ‘탈당’의 명분 정도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빅딜’이 성사되지 않는다 해도 열우당 · 한나라당의 개악 야합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열우당 · 한나라당의 개악 ‘대연정’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운동과 정치 대안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조명훈

‘입시 지옥’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과 고려대

지난 2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간에 학력차가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더니 5일 뒤 학교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신입생의 50~70퍼센트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고교평준화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학교 선택제도가 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와 지원이 없는 학교가 확연하게 나뉘면 고교 서열화가 분명해질 것이다. ‘일류 학교’에 들어가고자 고교 입시 부활 요구가 생길 것이고 결국 중학교까지 살인적 입시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중인 교원평가제까지 결합되면 학교 전반에서 경쟁 체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미 현 고교평준화 체제에서도 특목고 · 자립형 사립고 · 공영형 혁신학교 · 국제학교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 평준화를 파괴하고 있고, 서울의 자치구별 교육경비비조금 지원 금액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평준화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별로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평준화를 더 허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우선 선발 제도

한편, 고려대는 최근 발표한 입시 요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우선 선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08학년도부터 전체 정원의 최대 47.5퍼센트까지를 수능 점수로 뽑는 ‘우선 선발 제도’는 내신 비중을 줄여 일반 학교에 비해 특목고나 강남 지역 학교 등에 혜택을 주는 고교등급제의 변형판이다.

고려대는 우선 선발 제도가 “학생부 · 수능 · 논술 모두 잘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선발 경로를 다양화해 ‘열린 트라이앵글’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며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 같은 대학들이 주도해 내신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자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병

주고 또 병 주는’ 짓이다.

고려대가 이 같은 입시 요강을 내놓은 것은 ‘공부할 능력’이 있는 학생을 뽑는 것보다 ‘출신 성분’이 좋은 학생들을 뽑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번 입시 요강에서 미국의 대학수능시험(SAT) 성적으로 입학생을 뽑는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선발 인원을 할당하는 지역인재 전형과 사회봉사활동 우수자 전형은 폐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대학들이 엄격하게 서열화한 나라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나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모두 부유층에 유리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를 많이 쓰거나 조기 유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그럴 수 없는 대다수 학생들은 어지간한 대학 진학마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면 학교 선택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입시 교육을 끝장내야 한다. 그리고 입시 교육을 없애려면 고등학교 평준화를 강화할 뿐 아니라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지속적이고 커다란 대중운동과 투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강동훈

켄 리빙스턴이 차베스에게 가르칠 게 있을까?

얼마 전 켄 리빙스턴 영국 런던시장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와 거래를 맺었다.

런던은 값싼 석유를 공급받고, 베네수엘라 도시들은 교통 분야에서 런던의 “기술 원조”를 받는다는 것이다.

공급받은 석유가 런던 대중교통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니 베네수엘라는 지구에서 4번째로 부유한 나라 수도의 교통비를 보조하는 셈이다.

그럼 런던은 베네수엘라에게 어떤 기술 원조를 줄 수 있을까?

리빙스턴 시장은 런던 지하철을 부분 사유화했고, 그 결과 지하철 요금이 치솟았다.

리빙스턴은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파업 파괴 행위를 종용했고, 런던 경찰의 ‘반테러’ 활동을 지지했다. 런던 경찰은 2006년 7월 7일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를 잡는 다면서 한 무고한 브라질 청년을 사살했다.

런던 시민들은 다른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우고 차베스를 축출하려는 시도에 맞선 베네수엘라 대중 투쟁에서 배우는 것으로 말이다.

정치적 기회를 붙잡기 위해 모험을 해야 할 때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한미FTA 협상 등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주류 정치가 대다수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과 주류 정치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겨났다. 이것은 한 목소리로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지지하는 정치 엘리트와, 주류 정치가 자신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는 대중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간극의 상징이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대안 부재감(感)을 느끼는 한편,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갈망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진보진영은 주류 정치권에 도전해 정치적 대표체를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사태 전개 of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집권한 뒤 전쟁을 지지하고 시장에 굴복하면서 생겨난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급진좌파 정당들이 등장했다. 영국의 ‘리스펙트’, 독일의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 포르투갈의 ‘좌파블럭’, 브라질의 ‘사회주의와자유당’(P-SoL)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급진좌파 정당들의 등장은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매우 정치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운동의 정치적 대표체가 필요하다 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진보진영 선거연합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열우당이라는 병산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적 거처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열우당과 민주노동당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착잡하고 모순된 생각 때문이다. “열우당은 정나미 떨어지고 한나라당은 죽어도 싫은데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열우당을 지지할 수도 없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면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할 수 없을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대중의 모순된 의식에 적절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두 가지 편향을 피해야 한다.

먼저, ‘민주노동당으로 족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부유(浮遊)하는 광범한 개혁적 대중을 민주노동당이라는 수단만으로는 붙들어낼 수 없다. 보통 때 대중 의식은 과거 경험과 급진적으로 단절하기보다는 불균등한 변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민주노동당만을 고집해서는 이런 대중 의식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그 반대로, 부유하는 광범한 개혁적 대중에 구애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오른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 — ‘사회연대전략’이나 그 유사품을 내놓아 당을 체제에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보이게 하기, 민주노동당의 당 지분을 축소하기 등 — 도 잘못됐다. 이상현 민주노동당 기관지

위원장이 당 집권전략위원회 토론회에서 이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온건화로는 신자유주의적 ‘반개혁’과 전쟁 등 때문에 “민란” 수준에 다른 대중의 분노와 반감에 부응할 수 없다. 대중의 눈에는 기껏해야 열우당 ‘좌파’쯤으로 비칠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 단체들이 광범하게 결집하는 선거연합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선거연합의 기준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우당과 그 후신/변형 세력들 등 주류 정치권 반대이다).

한때 열우당 ‘개혁파’들이 차지했으나 지금은 정치적 공백으로 남아 있는 기반을 진보진영 선거연합으로 잠식해 들어갈 수 있다. 가령, 사회운동적 NGO들(이나 그 중 일부)이나 손석춘·임종인 등 지명도 있는 개인들이 진보진영 선거연합에 참여한다면 이들을 지지하는 개혁적 대중을 진보진영 쪽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시간만 까먹는다면 열우당 후신들이 다시 이 기반을 재탈환하려 들 것이다.

다른 한편, 선거연합에는 민주노동당 밖 노동자·민중 정치 단체들도 포함해야 한다. 예컨대, 민주노동총과 금속노조 지

도부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를 한 ‘노동자의힘’과 현장파들이 선거연합에 포함된다면 선진 노동자들의 광범한 결집이라는 상징적 효과를 톡톡히 낼 수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진보진영이 주류 정치와는 다른 정치적 대표성을 제공하기 위해 단결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정치 상황의 역동성 때문에 대선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

1998년 베네수엘라의 대선 경험이 그랬다. 당시 베네수엘라 운동은 파편화돼 있거나 미미했다. 1989년 ‘카라카스 봉기’(카라카소)의 패배 후유증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낳은 사회적 위기는 대단히 심각했다. 지배자들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땅에 떨어졌다. 우고 차베스가 사회주의운동당(MAS), 급진운동당(LCR), 공산당 일부 등과 선거연합인 ‘애국의 기동’을 결성한 것은 이런 정치 배경에서였다. 그 결과 1958년 이래 유지돼 온 ‘민주행동당-기독교사회당’ 체제가 붕괴했다.

후보 선정 문제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지지하게 모색한다면 지금 거론되는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재고하는 게 좋겠다.

‘개방형 국민경선제’는 민주노동당 후보 선정에 참가할 투표자의 폭을 비당원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그래서 당 밖 사람들에게 민주노동당을 ‘개방적’으로 비치게 하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개방형 국민경선제’는 ‘당원직선제’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를 선정하는 방안이다.

비당원까지 참가해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다 보니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수십만 명이 참가해 후보를 선출해 놓고는 그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라며 주저앉히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

른 한편, 비당원들도 참가해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출하는 바람에 그 후보가 사실상 진보진영 전체의 후보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 되면 다른 진보 단체들이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엄두를 못 낼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프랑스 좌파들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올해 4월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운동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다. 2005년에 유럽헌법을 부결시킨 거대한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있었음에도 그 운동의 정치적 대표체를 건설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실책이다. 각 단체들이 자체 후보를 먼저 정하면서 —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은 올리비에 브장스노를, 공산당은 마리-조르주 뷔페를, NGO들은 조제 보베를 정했다 — 후보 단일화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실패 원인 중 하나였다.

끝으로,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2007년 대선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서 출발했지만, 공동의 경험과 대선 결과 등에 따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연합체로 발전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 선거연합은 2007년 대선 공동 대응이라는 목표에서 출발하되, 미래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연합체로 발전할 전망을 배제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해소돼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의 해소는 한국 최초의 대중적 노동자 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성과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둘은 — 민주노동당과 상시적 연합체 — 대립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전망이 현재의 선거연합을 결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결코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2007년 대선 공동 대응이라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광범한 단결에 이바지할 것이다.

김인식

미국 상원에서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영국 리스펙트(RESPLECT) 하원의원 조지 갤러웨이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시에서 1만 5천 명의 여성 피복 노동자들은 아동노동 폐지, 작업조건 개선, 노조 결성 자유, 여성 투표권을 요구하며 싸웠다. 이 투쟁을 기리기 위해 탄생한 국제 여성의 날이 올해로 99주년을 맞는다. 여전히 불의와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심는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민세원(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



KTX 승무원들은 ‘처음엔 1년 계약직이지만 2005년에 공사화 되면 정규직이 될 거다’ ‘공무원 대우해서 정년 보장 해주겠다’는 철도청 경영진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입사했어요. 그게 거짓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홍익희 소속으로 채용됐지만 철도청 간부들이 교육하고 철도청장이 와서 인사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약속과 달리 복지 혜택이 전혀 없었어요. 단 하루를 아파도 진단서를 당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아프지 말란 얘기죠. 겨우 병가 신청을 해도 그걸 월급에서 깎아요. 초과근무수당도 나오지 않았고요.

게다가 2005년에는 월급이 20만 원 썩 내려갔어요. 정규직화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렸는데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노조를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관리자들의 성희롱적 행동, 임금 체불, 보장되지 않는 휴가나 병가, 보건휴가, 이런 것들을 놓고 싸웠어요. 그러다 철도공사가 우리를 법적으로만

자회사 소속으로 만들어 놓고 다 쥐락펴락 운영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싸운 거죠.

이철 사장은 “불 나면 승객들이 불 끌텐데 승무원이 꼭 안전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해요.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국민 안전을 하늘에 맡기는 거죠.

철도공사는 오히려 적자를 메꾸겠다는 승객들 주머니를 털고 있죠. 처음 개통할 때는 안 좋은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전혀 안하고 있어요. 이렇듯 KTX 승무원 문제는 승무원 고용문제만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있는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인센티브

정부 자체가 공기업 정규직 규모를 줄이려고 해요. 3만 명 넘는 철도 정규직 중에 5천 명만 남기고 다 비정규직화 하는 게 목표예요. 연말마다 공기업 평가를 하는데 인건비 지출 비율이 적을수록 점수

가 높아져서 인센티브를 줘요. 철도공사가 경영평가 꼴찌를 해서 1천억 원을 받았어요. 1위를 하면 엄청난 돈을 받겠죠. 이런 일들을 고쳐야 합니다.

요새는 가처분 때문에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서울역 밖에서 선전전하고 있어요. 이철 사장 퇴진 서명 받고.

1년 동안 싸우며, 제일 크게 깨달은 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정부나 법이 국민을 위해 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법조문에만 있고 실제 집행하는 현장에는 없어요. 공권력도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지,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요새 대한항공 같은 데서는 최종면접에서 노동조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좀 아는 척하고 진보적인 발언하면 떨어지죠.

우리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해요.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진실은

인정받는다든 원칙을 실감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행동이 분명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불의를 보고 꼭 참는 빗나간 삶을 살게 될까 봐, 반드시 KTX 승무원으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KTX 승무원들과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도,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이런 중요한 일이에요.

기업들은 여성 노동력의 가치를 남성과 똑같이 생각해주시지 않아요. 신입승무원을 다 여성으로만 뽑고 비정규직으로 외주 위탁하고 차별하는 게 현실이에요. 노동력을 싸게 쓰는 게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에 남녀를 안 가리고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외주화 하겠지만, 여성을 더 차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모든 남녀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게 당연시 될 거예요. 이대로 주저앉아서 당하고 있으면 남성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걸 바꾸는 노력을 모든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섰으면"

김지윤(고려대 출교자)

지난해 4월 고려대 당국은 보건대생 차별에 항의한 학생들 중 7명에게 입학 사실 조차 삭제하는 출교 조치를 내렸어요.

고려대 총장 어윤대는 “등록금이 1천5백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건희에게 박사학위를 주는 등 학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장본인이예요. 출교 조처는 이건희 학위수여 저지 시위 등에 참가했던 학생들에 대한 보복이었죠.

우리는 출교 당한 직후 학교의 왜곡에 맞서 날마다 수천 장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대자보를 붙여 진실을 알렸어요. 4천5백82명의 학생들이 징계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징계반대 집회에는 최대 6백 명이 참가했어요. 학내외 단체들의 지지 성명서가 줄을 이으며 진정한 여론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보여줬죠.

결국 지난해 11월 총장 선거에서 재임에 도전한 어윤대는 ‘부적격자’로 탈락했어요. 학생들의 끈질긴 항의 행동이 이룬 쾌거였죠.

농성 초기에는 많이 울고 좌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먼저 투쟁을 시작한 KTX 승무원노동자들을 보며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흔히들 여성들은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제가 본 여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역시 끈질기게 투쟁하며 더 강해지는 걸 느껴요.

투쟁하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며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심선혜
(보육노동자,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대의원)

보육노동자는 점심시간·휴식시간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임금밖에 못 받아요. 성대결절, 위염, 장염, 비염, 대·소변 장애, 각종 디스크, 관절염, 우울증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해요.

과도한 업무와 임금 체불에 시달리며 아이들과 학부모 앞에서 항상 밝게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다보면 애초의 사명감과 희망도 사그라들죠.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보육 예산은 증가했지만, 국공립시설 전면 위탁화와 보육료상한선 폐지 등 이면의 진실을 봐야 해요. 사회복지는 가고 시장복지가 오는

시대가 됐죠. 이것은 보육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권리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요.

작년 한 해 보육노조(현 공공서비스노조 보육지부)는 보육노동자 임금 현실화,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진행했어요. 보육노동자도 ‘천사’가 아니라 노동권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었죠.

이제 우리는 보육부문 단일사업을 넘어, 공공서비스 확대를 막는 ‘공공의 적’을 향해 산별이라는 더 큰 단결로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삶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20세기에 여성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변화는 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가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등을 크게 바꾸었다.

그 전까지 여성들이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허물어졌다.

20세기 초반 해도 미국·영국·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여성은 투표권조차 없었다. 그래서 당시 여성 해방 운동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는 여성 참정권이였다.

여성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장 부유한 여성들만이 대학에 갈 기회가 있었고, 초기에는 여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대학 당국에 맞서 싸웠다. 서구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여성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고등교육이 크게 확대됐다. 1960년대에 대학에 가는 여성은 극소수였으나 오늘날은 80퍼센트의 여성이 대학에 간다(2005년). 대학 재학생 중 여성 비율은 50퍼센트를 넘어섰다(2005년).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지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은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들이 높은 성적을 거두는 ‘여풍’ 얘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지난 세기에 여성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집 밖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여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비록 서구보다 10~20퍼센트 이상 낮지만, 이제 50퍼센트를 넘어섰다.

이 중 임금 노동자 여성들은 전체 노동인구의 41퍼센트를 차지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취업 여성의 다수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결혼한 여성이 다수다.

여전한 불평등

여성이 집 밖의 노동에 참여함에 따라 삶의 다른 측면들, 즉 결혼이나 성 등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예컨대, 1960년대 여성들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해 평균 6명의 아이를 낳은 반면, 오늘날 여성들은 20대 후반에 결혼해 한 명의 아이를 낳는다.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구시대적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성 관념은 갈수록 개방적으로 되고 있다. 동거와 독신의 증가, 결혼율 감소와 이혼 증가 등 성과 결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은 크게 바뀌고 있다.

이렇듯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여성 차별적 법률이나 제도도 꽤 바뀌는 등 오늘날의 여성은 대체로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보다 좀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러나 여성 해방은 아직 요원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

지만, 고용·승진·임금 등에서 여성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퍼센트에 불과하다.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임금과 노동조건이 형편없는 비정규직이다.

오늘날 안정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 구하기는 남녀 모두에게 별따기이지만, 여성들은 더욱 어렵다. 1980~90년대에 많은 여성들이 취업한 사무·서비스 분야는 저임금과 기약 없는 승진 기회, 노동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나쁜 작업 환경이 특징인 곳이 태반이다. 금융권에서는 1990년대에 폐지된 ‘여은행원제’가 최근 ‘분리직군제’의 형태로 되살아나 여성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성 취업이 확대됐지만, 양육의 주된 책임은 여전히 개별 여성들이 지고 있다. 취업 여성들은 직장에서 과중한 노동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퍼센트에 불과하다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임금과 노동조건이 형편없는 비정규직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하면서도 청소와 빨래, 아이 돌보기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린다.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라서 대다수 여성들은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지 못한 채, 적잖은 비용을 치르며 죄책감 속에 쉬쉬 해야 한다.

여성 해방

성은 개방되고 있지만, 갈수록 상품화하면서 성적 착취와 왜곡도 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몸을 눈요깃거리로 묘사하는 경향이 1990년대 들어 폭증해 여성들의 스트레스도 폭증하고 있다. 드라마·광고·패션쇼·영화 등에서 대다수 여성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체와 외모를 이상적 모습으로 강요하는 바람에 많은 여성들이 무리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로 고통 받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성 구타와 강간, 성추행은 여전히 소름끼칠 만큼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여성 차별이 광범한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류 언론은 여성 정치인이 늘어나면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국가 요직에 여성 참여가 늘어나면 남녀가 더 평등해지는 데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친자본가 여성 정치인이 노동계급 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명숙 총리, 강금실 전 법무부장

관 등이 이미 보여 줬다. 한명숙과 면담을 하러 찾아간 KTX 여승무원들은 전원 연행됐고, 강금실도 이주 여성들을 단속·추방하는 데서 여느 남성 법무부장관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

여성이자 흑인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부시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미국의 흑인 여성들은 여전히 대부분 가장 가난하고 차별받는 집단으로 남아 있다.

남녀간 격차 감소가 곧 여성 해방의 진전을 뜻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에서는 성별 소득격차가 꾸준히 줄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평균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빨리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산된 결과, 여성들 사이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소득격차는 여전히 않지만, 남성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보다 여성들의 계급간 격차가 훨씬 더 크다.

‘계급을 뛰어넘는 단결’은 20세기 초 여성운동에서도 불가능했는데,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날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3천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갖고 다니고 자신의 아이를 보모에게 맡겨 키울 수 있는 여성과, 그 집에서 채 1백만 원도 못 받고 아이 돌보기와 집안 일을 하는 여성의 처지가 같을 수 없다.

자본주의 계급 구조에 도전하기를 회피하는 여성운동은 여성 해방에 이르는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기업주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 위해 여성 차별을 끊임없이 부추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여성 해방 운동은 착취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모두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일부가 돼야 한다. 여성들이 겪는 특별한 억압에 맞서 싸울 뿐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더 광범한 사회운동(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에 적극 참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마비시킬 잠재력을 지닌 노동계급의 투쟁에 주목하고, 노동계급 운동에서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요구와 투쟁방식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진희

읽어 보세요



《여성 해방과 맑스주의》

크리스 하먼 지음
2,500원



《오늘날의 여성해방》

린지 저먼 지음
2,000원

저항과 자유를 ‘방지’하려는 테러방지법

최근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고 발뚧고 나섰다. “이번 윤 병장의 희생은 우리도 테러 예외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줬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8월, 노무현도 “안보 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테러 위협”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뚝딱잡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제국주의 전쟁에 편승해 파병을 적극 추진한 자들이 테러 위협 운운하며 테러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딕 चे니의 아프가니스탄 방문이 윤 병장의 죽음을 불렀듯이 ‘테러’의 진정한 책임은 전쟁 광들과 파병 추진자들에게 있다. 부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오히려 ‘테러’가 전보다 6백 퍼센트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막는다는 주장도 어설프다. 미국과 영국의 테러방지법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점령지를 통제하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 공격을 막지 못한다.

사실, 지배자들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방지’하려는 진정한 대상은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민주주의, 자신들의 전쟁에 반대하는 언론과 운동이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한 각국 정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테러와의 전쟁은 민주주의와의 전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합리화되는 “고문·비밀감옥·비합법적 내부감시·헌법 부정 등은 이제 앵글로-색슨의 코드”가 됐다는 것이다.

내부감시

실제, 부시의 전쟁은 그 미사여구와 달리 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했다. 판타나모 수용소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만연한 고문과 야만적 인권 유린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와의 전쟁’은 제국 내부에서도 벌어진다. 미국과 영국의 전쟁광들은 헌법과 의회의 통제조차 거추장스러워 한다.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조차 귀찮은 장식품일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애국자법·국토안전법·테러방지법 등을 도입해 보안기구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넘겨 주었다.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고(테러방지법의 모호한 기준에 따르면 반전 표현물을 지니기만 해도 구금될 수 있다),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도 국가의 일상적 감시 대상이 됐다.

게다가 이런 법들은 무슬림 혐오를 부추겨 인종적 편견을 확산시켰다. 제국의 지배자들은 마녀사냥과 공포를 동원해 민주주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고문과 인권 탄압의 대명사인 국정원 등 권위주의 통치의 유산에 반대하는 정서와 강력한 파병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은 ‘민주주의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한규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야 하는 이유

나토는 UN의 지원을 받아 6년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다. 이 점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합동 작전이다.

지난 2월 26일[한국 시간 2월 27일] 미국 부통령 딕 चे니가 ‘안전하다’는 바그람 공군기지(한때 소련의 공군기지가 있었던 곳이다)를 방문하는 동안 탈레반 병사의 자살폭탄 공격이 있었다. 이 공격으로 두 명의 미군 병사와 한 명의 용병(이른바 ‘청부업자’)이 죽었고, 기지에서 일하던 다른 20명도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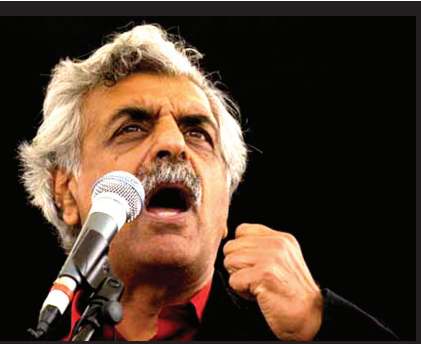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미국 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위기의 심각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했다. 2006년에 사망자 수는 크게 늘었고 46명의 나토군 병사들이 이슬람 저항단체와의 교전이나 헬기 격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현재 저항세력은 나토군이 미군을 대체한 칸다하르·헬만드·우루즈간 등의 주(州)에서 적어도 21개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의 많은 관리들이 게릴라 저항세력의 은밀한 지지자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 미국 대통령 부시의 아내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의 아내는 수많은 TV와 라디오 쇼에 출연해 아프가니스탄 여성 해방이 이 전쟁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누군가 이런 주장을 뒤흔들면 다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그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다.

대체 누가 이 재앙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프가니스탄은 왜 아직도 점령 상태에 있는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전략 목표는 무엇인가? 나토는 어떤 구실을 하는가? 그리고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한 나라가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슬러 계속 점령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

탈레반 정권이 무너졌을 때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곳에서도 이를 슬퍼하는 사람



이 글은 윤창호 병장이 희생된 다음 날 파키스탄 출신 사회주의자이자 저명한 반전 운동가인 **타리크 알리**가 쓴 글이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전문을 번역·개재한다. 타리크 알리의 저작 가운데 《근본주의의 충돌》(미토) 등이 번역·출간돼 있다.

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서방의 선전 공세로 조성된 희망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서방이] 새로 임명한 소수 특권층이 거액의 해외 원조 자금을 빼돌리고 뇌물수수 등 매관매직을 위해 그들 나름의 범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사실이 금세 분명해졌다.

고통은 민중의 몫이었다. 난민 가족 수용을 위한 초가집 [건설] 가격이 거의 5천 달러로 책정됐다. 이런 집들이 몇 채나 지어졌을까? 거의 없다. 매년 겨울마다 수백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집이 없어 얼어죽는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다.

대신에 서방 홍보업체들을 앞세워 엉터리 선거를 치르는 데 엄청난 돈이 쓰였다. 이 선거는 서방의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선거 결과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꼭두각시 대통령인 하미드 카르자이는 [심지어] 자신의 부족인 파슈툰족으로 이뤄진 보안 부대가 경호를 맡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고립돼 있고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터미네이터처럼 강력한 미군 해병대를 원했고, [결국 미국의] 약속을 받아냈다.

양귀비

제한된 마셜 플랜 식 개입이 아프가니스탄을 더 안정시킬 수 있었을까? 물론 공짜 학교와 병원, 보조금 지원을 받는 빈민용 주택, 1989년 소련군 철수 뒤 파괴된 사회 기반시설의 재건 등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양귀비 재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농업과 주택 산업을 지원하는 일도 필요했을 것이다.

전 세계 아편 생산의 90퍼센트가 아프가니스탄에 기반을 두고 있다. UN의 추산에 따르면, 헤로인은 아프가니스탄 국내총생산의 52퍼센트를 차지하고, 농업에서 아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이 모든 일에는 강력한 국가와 상이한 세계 질서가 필요했을 것이다. 오직 약간 정신난간 공상가만이 나토 국가들 — 자국에서 사유화와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 이 해외에서 계몽된 사회적 실험에 착수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수 특권층의 부패가 암처럼 만연했다. 몇몇 재건 활동 지원을 위해 책정된 서방의 기금이 현지 관리들을 위한 초호화 주택 건설에 유용됐다.

점령 2년째에 엄청난 규모의 주택 관련 부패 사건이 있었다. 정부 각료들은 자신에게 포상을 내리고 측근들에게 카불 시내의 일차 부동산들을 넘겨줬다. 카불의 땅값은

점령 이후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는 점령군과 그들을 따라온 수형 직원들이 전과 다름없는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카르자이의 동료들은 빈민가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에 대형 저택을 짓고는 나토군의 보호를 받으며 지냈다.

여기에 더해 카르자이의 남동생 아마드 왈리 카르자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큰 마약 재벌이 됐다. 최근 파키스탄 대통령령을 만난 자리에서 카르자이가 국경 지역 [마약] 밀반입에 대한 파키스탄 측의 단속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파키스탄 대통령 무샤라프 장군은 카르자이에게 당시 가족이나 잘 단속하라고 충고했다.

경제 상황 개선에 실패한 데 더해, 나토의 군사적 공격은 흔히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켰고,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에서 격렬한 반미 시위들을 촉발했다.

처음에는 일부 현지인들이 9·11 공격 이후 알 카에다 소탕을 위한 불가피한 치안 활동으로 용인했던 일들이 이제는 철저한 제국주의 점령으로 여겨지고 있다.

탈레반이 성장하고 새 동맹들을 얻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실천이 지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민족해방을 위해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러시아가 두 세기 동안 나토의 대가를 치르며 깨달았듯,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점령 상태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현재 나토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더 많은 군대를 보내는 것은 더 많은 죽음을 부를 뿐이다. 그리고 전면전은 인접국인 파키스탄을 불안정에 빠뜨릴 것이다.

무샤라프는 이미 파키스탄 내 무슬림 학교 공습 때문에 비난을 받아 왔다.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살해됐고 파키스탄의 이슬람주의자들은 거리에서 대중 시

위를 조직했다.

파키스탄 정부 내 소식통들은 사실 이 ‘선제’ 공습이 미군 전투기들이 이른바 테러리스트 기지를 공격한다며 저지른 일이라고 암시한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자신이 비난을 뒤집어쓰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마약 재벌

나토의 실패는 파키스탄 정부 탓이 아니다. 도리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파키스탄의 두 개 주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아프가니스탄 내 최대 부족인 파슈툰족은 파키스탄 내에 있는 같은 파슈툰 형제들과 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국경은 영국 제국이 그어 놓은 것이고 언제나 국경을 넘나드는 교류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나는 1973년에 파슈툰 부족의 복장을 입은 채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국경을 넘었다.

산악 지역을 가로질러 두 나라를 나누고 있는, 대부분 표지조차 없는 2천5백 킬로미터의 국경에 텍사스 식 울타리[미국 정부가 멕시코인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나 이스라엘 식

장벽[팔레스타인 지역을 고립·봉쇄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지은 분리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라크에서 미국을 배신한 유럽 동맹국들의 군기를 잡기 위한 전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워싱턴의 전략 목표라 할 만한 것은 없는 듯하다.

물론 알 카에다 지도자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체포는 전쟁과 점령이 아니라 효과적인 치안 활동으로 이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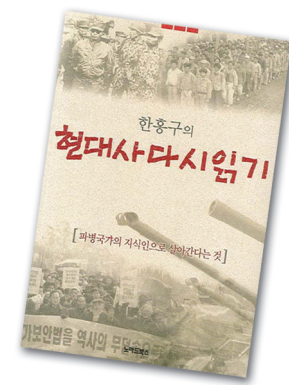
나토가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민족적·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연방 헌법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나토 점령은 이런 과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토의 실패는 탈레반이 부활하도록 만들었고 점점 더 파슈툰족이 탈레반을 중심으로 단결하도록 만들고 있다.

여기서 교훈은 이라크에서와 마찬가지로 간단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칠레에서 그랬듯이 정권 교체란 비록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아래로부터 이뤄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점령은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을 파괴하고 전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아프가니스탄은 그런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진보적 신입생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 — 파병국가의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출판사 : 노다북스



» 1면에서 이어짐

정부는 다산·동의 부대가 ‘재건·의료 지원 사업’을 벌여 왔고, 그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국회 사이트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검색하면 아무 자료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對)테러 전쟁 파견 동의안’은 검색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프가니스탄 파병군은 [정부가 인정하는] ‘대(對)테러 전쟁’ 참전 군인인 셈입니다.

임무도 ‘다국적군을 위한’ 건설 활동, ‘다국적군을 위한’ 진료 임무 등이지, 인도적 지원은 임무가 아니에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은 아예 책정돼 있지도 않았습

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온 전역 장병의 말처럼, ‘한국도 미군을 지원한다’는 식의 정치적 효과를 노린 ‘종합선물 세트’ 형 파병이었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위해 뭔가 구체적인 임무를 지닌 파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저항세력들은 다국적군과 한국군을 구분하지 않는 거죠.

현재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있고, 레바논에 특전사 중심의 전투병 파병을 강행하려 합니다. 이런 파병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라크에서는 미국의 방조 아래 종파간 갈등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이라크 증파는 이런 갈등을 줄이기보다는 더 심화하고 내전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만약 미국이 이란 공격을 시도한다면, 미 지상군이 주둔하는 이라크와 이란의 접경 지대에 끼인 아르빌의 한국군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부가 민간기업의 아르빌 진출을 허용했는데, 이걸 큰 실책입니다. 제2의 김선일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레바논 파병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지도 못할, 불필요한 파병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내세우지만 사실 유엔 PKO 임무에 인도적 지원 임무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공습을 재개할 경우 난민들의 PKO 캠프 접근을 막는 악역을 맡게 될 겁니다. 게다가 우리 군대가 주둔하게 될 티르 지역은 이스라엘 국경과 리타니강 사이에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군은 유엔군 기지도 공습한 사례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 물자와 민간 재건 전문가입니다.

오는 3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반전 운동이 우려하고 경고해 온 비극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이 반전 집회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은 이미 지난해 겨울 정기국회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군을 2007년 말까지 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설사 구체적 임무가 있더라도 다국적군을 지원하는 일을 더 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국제적 반전 행동에 함께해 왔습니다. 이라크 침략 이후 4년째 매년 3월 20일을 전후해 국제공동반전행동을 해 오고 있죠.

이번 3·17 집회는 윤 하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겁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이미 그 패권적 본질과 비인도적 결과가 검증된 ‘대(對)테러 전쟁’의 종언을 알리는 지구적 연대의 장이 될 겁니다.

패권주의·제국주의·군사주의는 지구 도처에서 좌절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전·평화를 위한 호소는 더욱 큰 울림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3·17 집회는 한국과 지구촌에서 반전 운동의 궁극적 승리를 한 걸음 앞당길 겁니다.

이윤율 하락 경향

지난 몇 년 간 중국의 자본 축적은 역동적이었다. 중국 GNP(국민총생산)의 거의 50퍼센트가 자본 축적에 투입됐다. 그러나 맑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체제의 역동적인 축적 과정 자체가 위기의 씨앗들을 품고 있다. 과잉생산과 이윤율 하락 경향이 그것이다.

첫째, 중국 국영 민간 기업들은 국제·국내 시장에서 서로 ‘박 터지게’ 싸운다.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속도는 생산 증가 속도에 한참 뒤진다. 중국 생산품의 90퍼센트가 과잉생산 상태라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지난 몇 년 간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

실제로,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11월호 보도를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진작 무너졌을 중국 국영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둘째, 엄청난 자본 축적 때문에 이윤율 하락 경향이 심화했다. 중국 경제는 개방 이후 25년 동안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엄청나게 고도화했다. 특히, 경제학자 후안강은 2000년 이후 중국 고정자본 대 노동종사자의 증가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고 지적했다.

일부 중국 기업들의 이윤율은 늘고 있을지 몰라도 경제 전체의 이윤 증가 속도는 오히려 하락중이다.

중국 경제의 이런 근원적 불안정성은 1998년 이후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과 부동산 거품, 대미 수출 성장 덕분에 억제돼 왔다. 문제는 중국 총수출의 30퍼센트를 소화하는 미국 시장의 전망이 영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거품

미국 자본주의는 2000년 ‘닷컴 호황’ 붕괴 이후 부동산 거품과 해외차입 덕분에 지금까지 중간계급과 부유층 중심의 소비 호황을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물론 이런 요인들이 자동으로 전 세계 불황을 낳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불안정성이 양대 자본주의 열강 — 미국과 중국 — 의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한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

먼저, 이것은 개별 자본에게 구조조정을 통한 착취율 강화와 다른 자본들에게서 이윤을 빼앗아오는 ‘거친’ 수법[자본 내 이윤 재분배]을 써야 한다는 압력을 가중시킨다.

또, 자본들과 유착한 특정 국민국가는 자국 자본이 세계 시장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군사력 사용까지 포함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제국주의 갈등 격화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는 자본축적에 필수적인 석유 등 원료 확보, 국제 시장에서 자국 자본의 권리 확대 등의 문제가 주요 제국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평화적’ 방식[제국주의 세력관계의 현상유지]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그런 위기가 예상될 때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본 지원 활동’은 점점 더 위험한 성격을 띤다. 예컨대, 군사적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충동에 더 쉽게 이끌린다. 부시 정부는 이미 그 사례를 보여줬다.

1929년 대공황 같은 엄청난 파국이 일어나고 국가들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변하지 않는 한은 그런 갈등이 당장 주요 열강 간 전면전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처럼 열강들이 이권을 차지하려고 중소 국가를 공격하거나, 대리전(에티오피아를 앞세워 소말리아를 침략한 것) 같은 방식은 가능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열강간 전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타이완 문제는 중-미 갈등이 장차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다.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를 그런 대로 조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 성장이다. 만약 이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양국 지배자들 내에서 서로 상대국을 협력자보다는 경쟁자로 보는 쪽이 우세해질 수 있다.

이미 미국 지배자들 일부는 민주당을 내세워 중국 자본의 미국 시장 진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차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런 경향은 한층 심화할 것이다.

이번 증시 폭락으로 드러난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면, 전 세계 좌파들의 정치적 과제가 더 막중해 보인다.

세계경제에 드리운 불황의 그림자

지난주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발(發)’ 주가 폭락은 세계경제의 투기적 성격뿐 아니라 현재 세계경제가 얼마나 중국과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 줬다.

그러나 3월 2일치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은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이윤이 기록적이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기본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했다.

낙관적 논평을 하는 사람들은 비록 앞으로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훨씬 심각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해마다 10퍼센트씩 성장해 온 중국 경제가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같은 ‘일시적 위기’가 만성 불황으로 심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소동으로 중국 경제와 밀접한 신흥시장들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흔들렸다. 이 국가들 중 하나에서 갑작스런 외국 자본 탈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중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경제가 이런 충격을 흡수할 만큼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이다.

김용욱

※ 이 글의 전문은 <맞붙>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본 구조조정과 계급갈등 격화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일차적 목적은 구조조정을 통해 착취율을 높여 이윤율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전 세계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며 구조조정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한 자본가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중국 자본가들도 똑같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중국은 이미 1990년대 말 국영기업들을 대거 구조조정했다. 그러나 당시는 대규모 국영기업을 배제한 구조조정이었다. 최근 중국 언론 보도를 보면, 대규모 국영기업을 포함한 또 한 번의 구조조정이 임박한 듯하다.

다만, 중국 공산당 정부는 한편으로 시장화 확대와 구조조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농민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보호, 관리 부패 척결을 말한다.

중앙 정부가 그런 양보 정책을 고려하는 이유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를 봐도, 2005년에만 노동조건, 농촌 문제, 환경오염, 관리 부패 등에 항의하며 1백 명 이상이 참가한 ‘군체성 사건’이 8만 7천 건이나 일어났다.

또, 노동자들과 농민공들의 처우 불만에서 비롯한 이직률이 앞으로도 계속 70% 80퍼센트로 유지되면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숙련 노동력 형성은 요원한 일이 된다.

그러나 실제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보면 시장화와 구조조정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시장화 확대와 구조조정 강화는 중국 내

계급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들 수 있다.

1990년대 말 구조조정 때는 엄청난 경제성장 덕분에 충격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었지만,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 상황이 사뭇 다를 수 있다. 더구나 중국 지배자들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단결해서 대응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그들은 분열해 있다. 만약 중국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다면 경제 잉여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훨씬 치열해질 것이다.

경제성장을 둔화와 지배자들의 분열은 1979년 민주벽 운동이나 1989년 천안문 항쟁처럼 하루에 1억 명 이상이 거리 시위를 벌인 대규모 저항과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적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와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그 타결 가능성을 낙관한다고 선전한다. 한국 사회운동의 반대는 당연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음에도 한국정부나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쪽도 그 결과에 그리 만족하는 듯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월 8일의 8차 협상을 앞두고 이경태 대외경제협력연구원(KIEP) 원장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높은 수준의 빅딜이 아니라 중간 수준의 딜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측 협상단도 “꼭 100점 이라야 되나요. 안 되는 부분은 들어내고 80~90점만 되도 되면 되는 거죠” 하고 말하고 다닌단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과 동조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욕심이었으나 ... 우리측이 협상을 너무 잘 해 잘 안 열어주고 미국도 애를 별로 안 써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미FTA 협상에 대해 보수진영에 변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FTA를 왜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보수 언론조차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은 부침이 있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다. 협상이 너무 졸속이라는 여론은 70퍼센트가 넘는다. 이 상황에서 지지율 10퍼센트 대의 노무현 정부가 애초에 노렸던 것처럼 ‘한 방으로 싹쓸이’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은 위험하다.

“국내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 제대로 개방되는 분야가 없다”는 협상단의 푸념은 단지 엄살만은 아니다.

두번째는 미국 측의 상황 변화다. 부시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대에 힘입어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에 무역협상추진권(TPA)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보니 시간이 없다. 더욱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 “다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말든지”식의 FTA 협상 방식을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불만이다. 우선 방

송·항공·항만·가스·우체국 등 정부 조달분야의 공기업 사유화가 제한될 듯하다.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였던 공공 분야 사유화가 제한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쇠고기 협상도 아직까지는 난항이다. 이른바 ‘뺏조각 논쟁’에서 한국 정부가 그나마 버티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 반대 운동의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다.

다른 분야도 되는데까지만 하자는 협상 타결 분위기가 크다. 요컨대 한미FTA 반대 운동은 협상을 결렬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진행을 늦추고 수준을 제한시켰다.

제한

물론 이런 ‘중간 수준’의 FTA만으로도 한국 민중이 당할 피해는 ‘중간 수준’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요구 수준을 낮추었다는 의약품 분야 하나만 보자.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에게 미-말레이시아 FTA가 일반의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공식 권고했다. 매우 보수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적인 세계보건기구조차 FTA가 최소 15년 동안 누적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미FTA가 ‘중간 수준’으로 뺏어져도 향후 5년 동안 추가비용이 10조 원이 넘는다. 현재 건강보험 약제비가 연 7조 원인데 추가비용이 1년에 2조 원이라는 것이 ‘중간 수준’의 FTA다.

또 광우병 ‘뺏조각 논쟁’을 보자. 국제적으로 공인된 실험을 통해 갈비뼈의 골수가 광우병 전염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런데 미국은 그 전염성이 확인된 소 한 마리의 나이가 38개월이었다는 점을 들어 30개월 미만의 소뼈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제한적인 공기업 민영화? 그러나 “공기업의 상업적 운영원칙”은 한미FTA 합의 사항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금지된다. 이것은 명확히 공기업 사유화의 1단계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중간 수준’의 FTA다.

더욱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지금 수준 이상의 공적 규제나 공공서비스 영역 확대가 불가능해진다. FTA의 원칙인 이른바 래칫(미늘톱니)방식인데 쉽게 말해 ‘낙장불입’ 원칙이다. FTA 조항에서 유

보되도 ‘현재유보’가 되면 현재 이상으로 규제나 영역 확대가 불가능하다. 설사 ‘미래유보’가 돼도 국내 법률이 바뀌면 유보 조항은 의미가 없다.

한미FTA 협정이 이른바 ‘중간 수준’의 FTA가 된다 해도 국내의 ‘자발적 자유화 조치’, 즉 알아서 하는 신자유주의 조치가 결합되는 순간 그것은 ‘중간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한미 양국 정부의 현재 전략은, 일단 되는만큼 한미FTA를 체결해 두고 나머지는 후속 조치들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즉 “중간 수준의 한미FTA + 자발적 자유화 조치”가 현재 한국 정부의 FTA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FTA, 예를 들어 EU 또는 중국과의 FTA가 더해질 것이다.

낙장불입

결국 협정 체결을 앞둔 한미FTA 반대 운동은 온전히 한국의 사회운동에 그 성패가 걸려 있다.

여기서 이제까지의 한미FTA 반대 운동을 돌이켜 보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대로 한미FTA 반대 운동은 아직 협정 체결을 저지할 정도까지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저들의 한미FTA 협상 전략을 바꾸어 놓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 앞에는 한미FTA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추진되는 자발적 신자유주의 조치들, 즉 연금 개악, 노사관계 로드맵, 공공서비스 시장화가 놓여 있으며 또 다른 중요 FTA들이 놓여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FTA 반대 투쟁과 또 다른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이를 발판으로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을 발전시켜 나갈 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비판도 낙관도 할 때가 아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는 지금 전진 중이다.

우석균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이다

《밋볼》 편집자가 대학 새내기들에게 권하는 책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 레비 지음, 돌베게)

이 책을 쓴 프리모 레비는 191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났다. 1943년에 젊은 화학도였던 그는 나찌의 점령에 맞서 빨치산 투쟁을 하다가 이듬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졌다.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

아남은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7년에 이 책을 썼다.

《이것이 인간인가》는 레비가 쓴 최고의 책이다. 이 책은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짐승으로 전락하기를 거부하는 인간들,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다.

남은커녕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상황에서 레비의 친구 스타인호프는 잘 씻고, 똑바로 걷고, 발을 질질 끌지 말고, 나찌가 강요하는 규율을 맹종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용기를 북돋는다. 레비와 친구 알베르토에게 수프를 더 얻어 주려고 날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로렌조의 우정은 감동적이다.

물론 극단적인 폭력과 공포, 절망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비참하고 비열한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묘사

한 덕분에 때로는 레비가 수용소에서 저항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믿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러나 레비가 쓴 책에는 모두 저항이 나타나 있다. 예컨대, 그가 1987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 《익사한 자와 구출된 자》(The Drowned and the Saved)에서도 동료들을 지키려고 기꺼이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가스실에서 시체 처리하는 일을 맡고 있던 그들은 소각로 다섯 개 중 하나를 폭파시켜 나찌의 재소자 말살 작업에 차질을 빚게 한다. 물론

그들은 모두 체포돼 교수형 당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함께 저항하지 못한 자신들을 부끄러워한다.

홀러코스트와 아우슈비츠는 20세기의 최대 비극 가운데 하나였다. 그 비극의 참상뿐 아니라 이에 맞선 저항의 가능성도 보여 준 《이것이 인간인가》는 오늘날 강대국의 패권 전쟁, 사람보다 기업 이익이 먼저인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 만행과 참상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감과 용기를 줄 것이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인종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학생 정치활동 제약하는 고려대학교 당국



지난해 부당 징계에 항의하는 고려대 학생들 - 강연회 불허는 '신자유주의 대학 만들기'의 연장선 위에 있다

연장선 위에 있다.

고려대학교는 2년 전 이견희 학위수여 항의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지난해에 출교시키며 가혹하게 학생운동을 탄압했다. 그뿐 아니라 강의실 대여 기준을 강화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제약하려 했고, 심지어 학내 단체인 고려대학교 시설관리노동조합의 강의실 대여조차 불허했다.

2005년에는 '전국 대학생 5월 한마당' 행사에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김성수의 친일 행적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행사를 원천봉쇄했고, 지난해에는 해마다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던 '다함께'의 '전쟁과 혁명의 시대' 토론회도 불허했다.

대학은 마땅히 학문과 사상을 토론할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함에도 고려대학교는 오히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아 온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최근 이필상 총장이 논문 표절 의혹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총장이 사퇴했다. 고려대 재단이사장 현승종은 일제 시대 일본군 장교를 지냈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에 반대하는 우익이다. 이번 강연회 불허를 최종 통보한 경영대 학장 장하

성 교수는 '기업 소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펀드를 만들었지만, 이 펀드는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건대 학생 차별에 항의하는 학생을 구타하기도 했다.

'대학생 다함께'는 고려대학교 당국의 강연회 불허 방침에 맞서 예정대로 강연회를 진행할 것이다. 만약 학교의 불허 때문에 이번 강연회가 열리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대학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미진

'대학생 다함께'는 강연회 불허에 항의하는 고려대 학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강연회가 성황리에 치러진다면 이것이야말로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에 맞선 최선의 방어가 될 것이다. 진보적 사상에 대해 토론하기를 원하는 대학생 여러분이 더 많이 참가해 경영대 학우강당을 매워 주기를 호소한다.

Forums

부산대
파병 한국군,
왜 죽각 돌아와야 하는가
3월 15일(목) 저녁 6시 30분
장소: 부산대 제 1사범관
문의: 010-4569-0501

서울 중부
21세기 사회주의
- 민주적 참여계획경제는 가능한가?
3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연사: 정성진(맑스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와 트로츠키》 저자)
장소: 명동 향린교회 1층 향우실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맞불〉 증면을 위한 5천만 원 모금에 동참합시다

02) 2271-2395으로 메시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17002-04-078931

기업은행 066-042771-01-012

농협 100037-56-119794

신한은행 308-12-498840

우리은행 1002-130-549338

우체국 011726-02-129945

하나은행 197-910005-87207

〈맞불〉 웹사이트 www.counterfire.or.kr에서

핸드폰 결제와 CMS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MS 모금은 매월 25일에 인출됩니다.



-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정부의 감시와 통제로 에이즈를 막을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감염인을 감시하고 격리하는 것으로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며, 성매매 여성의 강제 검진 폐지, 이주노동자 감염인을 국내인과 동등하게 치료하고 대우할 것, 감염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정책들은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제안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보수 언론은 인권위가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쳤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감염인을 감시하고 격리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된 ‘착각’ 때문에 감염인들은 숨어서 고통받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인 윤 가브리엘은 지난 2003년 감염인 최초로 ‘에이즈 인권운동 연대 나누리+’를 건설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지 7년이 된 가브리엘은 지금 다리와 눈에 바

보와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에 보고해야만 조금이나마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의 관리 시스템과 통제 법률 때문이다. 윤 가브리엘은 이런 관리·통제 시스템을 거부한 대가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어살아야 했다.

지금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공동행동’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에이즈 예방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진정 에이즈를 예방하고 싶다면 예방법 전면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러스가 퍼져 걷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다. 월 2백만 원이 넘는 치료비 걱정에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개인적

그리고 모든 감염인들에게 의약품이 무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율(동성애자인권연대)

윤 가브리엘 치료비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이 3월 16일 7시 서울대병원 합춘 회관에서 열립니다. 에이즈 해방과 윤 가브리엘 치료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계좌 : 001502-04-153002 국민은행 정율

조희연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입장이 아니다

〈맞불〉 33호 ‘진보 논쟁’ 기사는 노무현의 실패를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과 조희연 교수를 지적했다. 그러나 손혁재와 조희연을 동렬에 놓는 것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손혁재는 노무현 정부에 면죄부를 주려고 ‘외부 요인’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조희연은 신자유주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중도개혁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손호철 교수처럼 조희연의 입장을 ‘구조화원론’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조희연이 구조적 원인과 노무

현 정부의 능동적 대처 방안에 대해 변증법적으로 분석해 비판하지 않고 나열적으로 지적하다 보니 중도개혁세력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실천적 결론을 맺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는 있다.

전주현

국가보안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다함께’ 동지들.

보내 주신 〈맞불〉과 ‘자료집’ 그리고 서한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주장 중에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비판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대는 ‘정책’이 아닌 ‘투쟁과 조직’을 통해 건설돼야 합니다. ‘사회연대전략’은 ‘정책 이슈나 제한전술’로 한정한다면 모르나 실천 전략화하거나 전략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 (중략) ...

비록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국보법 체제에 대한 원칙적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저의 실천적 의지와 각오를 되새기는 길이라 믿습니다.

또한 저는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실천하며 지배자들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실천의 현장에서 연대하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2007년 2월 13일
영등포에서 최기영 드림
(‘일심회’ 구속자)

1997년 대중파업이 국가보안법을 약화시켰을까?

〈맞불〉 33호의 국가보안법 기사와 달리 김대중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기 시작한 이유가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투쟁의 여파인지는 불확실하다.

김대중 정부 등장 직후 1998년에는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증가했고, ‘IS 조직 사건’이나 ‘영남위원회 사건’ 등

공안사건들도 발생해 ‘공안정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정확히 2000년 후부터 국가보안법 탄압이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어든 것을 19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투쟁의 여파라고 단정 짓기에는 비약이 아닐까?

전주현

1997년 대중파업은 민주화 추세를 가속화했다

전주현 동지는 1998년에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늘었다고 했는데 이는 통계와 다르다. 1997년 구속자는 6백63명으로 정점에 올랐고, 김대중 정권이 출발한 1998년 2월 이후 그 해에 3백89명, 1999년에는 2백99명, 2000년 1백28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1997년 대중파업은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화 투쟁’이기도 했고, 중간계급의 상당한 지지를 끌어낼 정도로 광범한 투쟁이었다. 그래서 야당이던 김대중도 이 투쟁을 지지하는 제스처를 취해야만 했다. 이 점에서 나는 1997년 대중파업이 민주화(또

는 자유주의화) 추세를 거스를 수 없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구속자 수가 준 데는 남북 분단 이데올로기의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중장기적 계급 세력균형 변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불완전하다.

그럼에도 전주현 동지가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활동가들을 탄압한 점을 강조한 것은 옳다. 그 때는 현대차노조의 공장점거 파업 등 구조조정에 반대한 노동자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졌고 김대중은 이를 억눌러야 했다.

한규한

소식 / 보고

기아차 투사들의 당당한 재판 투쟁

지난 2월 28일 팽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기아차노조 홍진성, 김문영 대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는 기아차노조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다함께, 구노회 등 연대단체 회원들이 모여 규탄 집회를 가졌다.

현재 재판부는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반성문을 강요하고 있다. “반성할 만한 일을 한 적 없기에 반성할 이유도 전혀 없는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미끼로 반성문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팽일 오전이었지만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는 1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재판을 받는 노동자들은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그때마다 박수가 쏟아졌다. 기가 죽은 검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징역 4년을 구형한다”는 말만 두어 번 반복했다.

홍진성 씨는 “대추초등학교 강제대집행은 국가 폭력이었기에 이에 맞선 투쟁은 정당했다.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주민들을 잔인하게 짓밟은 노무현 정권”이라며 통렬하게 규탄했다. 김문영 씨도 “진압부대 1만 5천 명에 1천5백 명 정도 되는 시위대가 에워 쌓여 방패로 찌고 머리가 깨져나가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팽택 미군기지 투쟁으로 구속된 기아자동차노조 조합원은 현재까지 7명이다. 검찰은 추가로 조합원 8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투쟁에 앞장섰던 노조 선봉대원 2명에게 1천3백만 원이 넘는 손해가압류 통지서를 날렸다.

사법부와 사측이 합작해서 기아차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노총 ‘선봉노조’와 투사들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아차의 투사들과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유청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해고자 복직투쟁 승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투쟁으로 고려대 안암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해고된 지 1개월 만에 복직했다.

이 4명은 임상병리사로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지난 1월 1일 병원으로부터 “12월 31일로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지부는 해고된 노동자들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날마다 부당 해고를 알리는 활동과 1인 시위를 벌였다.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지부는 정규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비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합원 중 4백여 명이 모금에 동참해 4백만 원에 달하는 생계비를 마련했다.

결국 한 달 넘게 투쟁한 끝에 병원한테서 복직 약속을 받아냈다.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임단협에서 주요 요구 중 하나로 채택해 꾸준히 싸워 왔고, 그 결과 2003년에는 9명, 2004년 30명, 2005년 9명, 2006년 2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런 연대의 사례가 다른 작업장으로도 더 확산돼야 한다.

이현주

이라크 석유법 석유 강도가 본심을 드러내다

지난 2월 26일 이라크 내각에서 새 석유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라크 석유 산업을 사실상 서방 다국적기업들의 수중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옵서버>는 이 법안이 미·영 정부의 주도과 압력 하에 — 초안 자체가 아예 아랍어가 아닌 영문으로 작성됐다 — 통과됐다고 폭로했다.

이라크의 석유 산업은 1970년대 초에 국유화됐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라크 정부의 석유 산업 권한들을 다양한 “기술적·상업적 조직과 기구들”에 넘기도록 하고 있다.

그리 되면 민간 석유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서 석유를 탐사·채굴할 수 있는 “탐사 및 생산 계약”을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비록 법적으로는 석유가 ‘국가 재산’으로 남겠지만, 실제 수익은 다국적기업들이 챙길 것이다.

게다가 개발권을 따낸 외국 기업들은 이라크 기업을 하청업체로 둘 의무도, 벌어들인 돈을 이라크에 재투자할 의무도 없다. 이라크 노동자들을 고용할 의무도 없다. 중동의 어떤 나라도 —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친미 왕정들조차 — 이런 식으로 자국의 석유 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법안은 이미 심각한 종파간 반목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라크의 석유는 북부의 쿠르드 지역과 남부의 시아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반면, 바그다드를 비롯한 중부의 수니파 지역에는 매장된 석유가 거의 없다.

전쟁

이라크의 석유 전문가인 푸아드 카심 알 아미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방과 주(州) 정부들이 석유 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이라크를 분할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의] 결과는 석유 생산을 둘러싼 파괴적인 경쟁일 것이다.”

그러나 미·영 정부와 그들이 지지하는 꼭두각시 정권의 결정은 이라크 석유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6일 바스라 대학에서 새 석유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총회에서 바스라 석유노동자총연맹(이하 석유노조) 대표인 하산 주마 아와드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지배자들이 … [이라크 전쟁에] 수백억 달러를 퍼붓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석유다. [그러나] 우리는 민중의 운명과 부를 가지고 선부른 술책을 부리려는 자들을 역사가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그리고 신의 저주와 이라크인들의 분노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석유노조 조합원들은 이라크 침공 직후 정유 시설에 들어온 KBR(딕 체니가 사장으로 있는 헬리버튼의 자회사) 직원들을 몰아낸 바 있다. 또, 2003년 9월에는 당시 점령당국의 임금 삭감 조치 등에 맞서 이를 동안 “무장 파업”을 벌여 승리하기도 했다.

김용민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이 부른 비극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정말이지 “[이라크] 침략이 초래한 재앙은 [전쟁 전에] 사람들이 내놓은 그 어떤 최악의 전망조차 훌쩍 뛰어넘고 말았다.”(노엄 촘스키)

오늘날 “이라크는 세계 최악의 난민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국제 난민기구’)

미군 점령 뒤 무려 2백만 명이 이라크를 탈출했다. 또 다른 1백70만 명은 이라크 내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는 올해 안에 1백만 명이 추가로 이라크를 떠날 거라고 예상한다.

엄청난 난민 위기의 배경에는 미군 점령이 낳은 끔찍한 폭력과 경제적·사회적 재앙이 있다. 저명한 의학 저널 <랜싯>의 보고를 보면, 미국의 침략 뒤 무려 65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전쟁과 점령의 결과로 사망했다. 2003년 침략 뒤 지금까지 사망한 어린이들만 26만 명이다.

유엔 특별조사관 맨프레드 노와크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미군과 이라크 정부군이 자행하는] 고문은 전혀 통제할 수 없다. …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후세인 정권 시절이 더 나았다고 말한다.”

점령이 부른 온갖 폭력 때문에 이라

크에서는 외출도, 사원에 예배하러 가는 것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모두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 버렸다.

경제 생활도 처참하다. 점령 뒤 치솟은 물가 때문에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기본적인 식료품과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까지 석유 1갤런[약 3.78리터] 가격은 4센트밖에 안 났다. [그러나] IMF가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라고 [이라크] 석유부에 압력을 넣은 뒤에는 공식 가격이 67센트까지 올랐다.”(〈뉴욕타임스〉)

팔루자

“이런 물가 양등은 이라크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이다. 이라크인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겨우 1백50달러(약 14만원)인데, 그나마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다.” 현재 이라크 노동자들의 60퍼센트 이상, 어떤 추산에 따르면 70퍼센트 이상이 실업 상태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보고서는 각종 보조금 폐지와 국영기업 폐쇄 등 미국이 강요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 때문에 실업률이 급등했다고 지적한다. 현재 이라크인의 3분의 1이 빈곤에 허덕이는데, 이는 미국이 침공하기 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아프거나 다친 아이들이 방치된 채 죽어간다”

들이 수백 명씩 방치된 채 죽어간다.”

“손이 절단된 아이들, 다리를 잃은 아이들, 사지가 잘린 아이들에게 의족이나 의수조차 줄 수 없다. 아이들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치료할 엄두조차 못 낸다.”

의사들은 아이들이 산소 마스크가 없어 플라스틱 관을 코에 꽂고 있다가 죽어 간다고 말한다. 어떤 아이들은 비타민K 알약이나 깨끗한 주사바늘이 없어서 죽는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봐야 고작 95센트(약 8백96원)도 안 되는데 말이다. 심지어 의사들은 3.5센트(33원)짜리 수술용 장갑이 없어

미국이 ‘재건’을 떠든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이라크 인구 절반 이상이 여전히 물(상수) 부족에 시달린다. 이라크 인구의 40퍼센트는 적절한 하수 시설조차 없이 살아간다.

위생 시설이 파괴되자 예전에 사라진 질병들(이질·콜레라·장티푸스 등)이 다시 창궐했다. 지난해 팔루자 — 미국이 두 차례나 공격해 사회기반시설들을 초토화시킨 수니파 도시 — 에서는 깨끗한 식수가 없어 어린이들의 설사 발병률이 70퍼센트나 증가했다.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프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보고를 보면, 이라크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천 명 중 59명이 죽는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아 사망률이다.

부시가 내놓은 ‘해결책’ — 미군 증파 — 은 이 모든 재앙을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지난해 여름 미국은 바그다드에 1만 4천 명이 넘는 군대를 증파했지만, “이미 심각했던 바그다드의 폭력 발생 수준이 무려 43퍼센트나 급증”(‘이라크 스터디 그룹’ 보고서)했을 뿐이다.

이라크 점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막지 못하는 한 전쟁광들은 이 야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쟁과 점령이 낳은 야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는 3월 17일 서울역 광장에 모여야 한다.

한 아기의 병이 다른 아기에게 감염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한다.

의사들은 “[미국과 영국이] 저지른 과오와 이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가 이라크의 소아과 병원들에 점점 더 끔찍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들은 이라크의 병원들이 어린이들을 적절히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수단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라크 개발 기금 가운데 영국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3백3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이 돈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부패와 횡령, 용병들의 보수 지급 등으로 사라졌다고 폭로했다.

지난 1월 19일 영국과 이라크의 저명한 의사 1백 명이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점령 치하에서 붕괴된 의료 체계가 어떻게 이라크인들, 특히 어린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지 고발했다.

이 의사들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는 “기본적 의약품과 소모품이 부족해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었을 아이